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2015. 12. 1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개요	1
II. 총칙	
1. (제2조) 정의	2
2. (제3조) 적용범위	9
III. 규제	
3. (제4~6조) 규제법정주의 · 규제의 원칙 · 규제 일몰제	10
IV. 행정지도	
4.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	13
5. (제8조) 행정지도등의 방식	16
6. (제9조~제11조) 행정지도등 시행 전 절차	17
7. (제12조) 행정지도 등록 및 공개	20
8. (제13조) 존속기간	25
9.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26
V. 감독행정	
10. (제15~제16조) 감독행정	27
VI.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11. (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28
12. (제18조) 옴부즈만	34
13. (제19조) 금융현장지원단	38
14. (제20조) 실태평가	40
15. (제21조) 교육	40
16. (제22조) 규제정비의 달	40
17. (제23조) 상벌	41
18. (제24조) 적용권고	41

I. 개요

1 추진배경 및 경과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 **법령규제 제·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기준*을 제시
 - * ①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②선진사례 벤치마킹, ③오프라인→온라인, ④포지티브→네거티브, ⑤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당국 **내부통제 강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음부즈만·외부 실태평가** 제도화
- **10월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운영
 - * 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청회(11.26일) 등을 통해 규정에 대한 **업계 의견도 청취**

2 규정 주요내용

- ① 규제 효율성 제고 노력, 사후규제 중심, 네거티브 방식 적용 등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
- ②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원칙 및 절차
 - 구두지도 금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금지 등
- ③ **음부즈만, 외부기관 평가, 상벌** 등 상시 점검·개선 시스템 규정화

II. 총칙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규제” (이하 “규제”라 한다)란 특정한 금융 관련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검사 대상 기관
 - 나. 금융사업자단체
 - 다.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법인·단체
3. “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
4. “감독행정”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토대로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금융감독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상 “법령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규제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므로 본 규정에서는 **규제로 간주**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

※ **참고 : '10.7.28자 국무총리실 공문 주요내용**

위원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정·개정되는 모든 시행세칙에 대해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 금융회사등

- **피규제자에 대한 정의조항**이므로 금융당국 소관 법령에 따라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제외

*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등

- **업권 협회***는 “금융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한국거래소**는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법인·단체”에 해당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3.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구별기준

-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등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

- **(행정지도)** 관계법령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감독행정)** 금융회사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을 입법 취지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등을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

* 예 : 소비자보호 준칙,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 위험관리기준 등

참고 법령등

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참고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기관수	검사대상기관
금융지주	10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C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은행부문	58	시중은행(7), 지방은행(6),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특수은행(3), 외국은행 국내지점(39), 전국은행연합회
중소서민금융부문	2,778	상호저축은행(7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산협조합(1,3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9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72), 여신금융협회, 대부업자(350)
보험부문	61	생명보험사(24), 외국생명보험사 국내지점(1), 손해보험사(18),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부문	575	증권회사(46),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1), 선물회사(7), 신용평가회사(4), 채권평가회사(4), (전업)집합투자기금평가회사(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114), 종금사(1),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9), 자산운용회사(87), 투자자문회사(170),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6),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88), 부동산신탁사(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기타부문	119	전자금융업자(71), 신용정보업자(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가통신업자(16)
합 계 ^{*)}	3,601	

주 : 유통계카드사(3), 보험대리점(34,468), 보험계리업(19), 손해사정업(944), 보험중개사(121), 역외투자자문회사(163), 투자회사(104), 사모투자전문회사(296),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3), 경영신용정보회사(3), 회계법인(150) 등 36,274개 제외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금융감독원 감독행정 사례

1.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및 이용회원 권익 강화(상호여전)

1. 공문내용

☐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리볼빙서비스 약정시 회원 자격심사 철저, 회원 신용도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 차등화, 이용회원의 신용도 모니터링 강화 및 부실징후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관리 강화

☐ 이용회원의 권익 강화

- 고객의 서비스 이용사실에 대한 안내강화, 최초 약정시 설명의무 이행 철저 및 약정기간 설정·운영

2. 근거 법규

- ☐ 여전업감독규정 제14조에서는 여전사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 여전업감독규정 >

제14조(위험관리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함.

3. 공문 필요성

- ☐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이용회원 및 이용잔액이 증가함에도 법규에 리스크관리 기준 및 이용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도('11.3.)

2. 내부통제 강화로서 위기상황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기

1. 주요 공문내용

- ☐ RBC비율 취약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 위기상황 분석시 금리인상에 따른 RBC하락 가능성을 감안한 위기 상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유념 하도록 주의환기

2. 근거 법규

-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등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5>(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

2.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3. 공문 필요성

- ☐ 미국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상승반전할 경우 채권평가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RBC비율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 그러나 법규에서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위험의 인식 및 통제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반영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위험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미리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3. 연금저축상품관련 유의사항 통보(연금저축)

1. 주요 공문내용

- ☐ 개인연금의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통보서류상 당사가가입일과 최초 가입 일자를 구분 표시하여 법상 의무납입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13.6.)

2. 근거 법규

- ☐ 舊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가능함을 명시

< 舊 조세특례제한법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문 필요성

- ☐ 계약이전 통보서류 상에 최초 가입일자가 아닌 현 상품의 가입일자만 표기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의무납입기간(10년) 산정시 여러 차례 계약이전을 한 가입자의 납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당국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
- ☐ 예외 요건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금융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이 인정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한정

참고 법령등

-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외의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III. 규제

3. (제4~6조)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규제 일몰제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당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규제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공정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전규제의 필요성
2. 국제기준 또는 외국 유사제도와와의 비교
3. 업권 내 또는 업권 간 규제의 차이 해소 필요성
4. 원칙허용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5. 피규제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감안하여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6.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6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금융당국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1. 규제법정주의(제4조)

- ☐ 금융감독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2. 규제 원칙(제5조)

- ① 제1항에 “**비례의 원칙**”을 규정
- ② 제2항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고려사항은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제시한 **7개 합리화기준**을 규정화*

* 사후 정비목적인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 합리화”는 규정화에서 제외

- ①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
- ②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③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
- ④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⑤ 업권별·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
- ⑥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⑦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3. 규제 일몰제(제6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와 달리 일몰제 적용상의 예외 미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일몰제 적용대상인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금융감독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절차 회피 행태**가 종종 나타남
 - 이에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참고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행정지도

4.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 ※ 감독행정에 적용(제16조)

- 제7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금융 관련 법령등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금융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②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등에 행정지도를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시장참여자간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을 말하며, 법령등에서 위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 ④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작·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당국은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등의 인사,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사항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인사에 대한 개입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행정지도의 비례의 원칙 규정(제1항)

②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내규, 지침 등이나 협회 자율규제 등에 반영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규정(제2항)

- 단, 법령에서 위탁한 협회 자율규제사항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감독은 가능

* 예 :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⑥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⑤ **보험협회**는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가(제4항)

④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 원칙(제5, 6항)

- (원칙)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등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해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불가
- (예외) 단, 인사를 제외한 가격, 배당 등에 대해서는 ①건전성, ②금융이용자보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원칙 미적용
 - 개입금지 범위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금융위원회 의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외조항 적용의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5, 발표) 中 관련 내용 발췌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
 - ①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카드 수수료 등)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 ②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 목적만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체계하에서 조정
 - ③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주주총회 등)를 통해 결정하며,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바젤Ⅲ등 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자본 유지 필요
-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대외 공표(금융회사에도 개별통보하며, 관련 질의 시 즉시 회신)

참고 법령등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 행정지도등의 방식

제8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인지 여부
2.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3.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4.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5. 관련 법령등
6.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
7.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② 행정지도는 금융당국 부서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결재한 공식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당국은 제2항 단서에 의해 구두로 시행한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없이 문서로 시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① 행정지도 시행 시 기재 필요사항(제8조제1항)

- ❶ (제1호)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
 - ❷ (제2호)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 ❸ (제3호) 금융감독기관 총괄 부서로부터 부여받은 일련번호
 - ❹ (제4호) 부서장급(금감원의 경우 국장) 이상의 명의로 발송
 - ❺ (제5호) 관련 법령등
 - ❻ (제6호)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을 기재(안내사항)
 - ❼ (제7호)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고유의 내부경영에 개입한 경우 제7조제6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적시
- ➡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 행정지도 시행 가능

② 행정지도등은 반드시 문서로 시행하고, 구두지도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지체없이 문서로 시행(제8조제2.3항)

6. (제9조~제11조) 행정지도등 시행 전 절차

제9조(의견청취)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면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2. 금융회사등의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행정지도로 인한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리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2.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3.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4. 존속기간
5. 추후 법령 또는 규정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제11조(사전보고)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 기관장(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심의하는 금융감독원 내부 의결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6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2. 관련 법령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5. 제10조 각 호의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7. 존속기간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1호의 경우 : 지체없이 보고
2. 제9조제2호의 경우 : 반기별 보고

1. 의견청취(제9조)

□ 행정지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 「행정지도 운영규칙」보다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규정**

-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는 금융당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참고 : 「행정지도운영규칙」제5조제1항 “의견청취” >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사전협의(제10조)

□ 모든 행정지도 시행 시 **금융위, 금감원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감독행정의 경우, 감독행정 시행 이전에 시행 내용을 금융위는 금감원 관련 부서에, 금감원은 금융위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함(제15조)

3. 사전보고(제11조)

□ 금융위 소관 부서장은 금융위원장에, 금감원 소관 부서장은 자체 심의기구인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

*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위원 : 부원장 9명)으로 하며, 금감원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

□ 제9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보고 가능**

* 현재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감독원은 법무실이 담당

가. 주요내용

- ☐ (구성) 금감원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 위원 : 금감원 부원장보 9명(안전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및 금융업계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 지명 가능)
 - * 간사 : 금감원 법무실 국장

- ☐ (기능) 금감원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을 통할

① 행정지도, 감독행정 시행시 적정성 사전 심의

행정지도	(원칙)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심의
감독행정	(원칙) 각 부서 책임 하에 공문 시행 ⇒ 별도 심의절차 불요 (예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

② 행정지도 등 운영현황 점검

③ 시행세칙(표준약관 포함)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운영) 안전작성 부서장이 발표하고, 참석 위원들 토론 후 의결
- 행정지도 심의 안전은 의견수렴절차 종료 후 부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

나. 추가 검토 필요사항

- ☐ 심의내용 외부공개 필요여부

7. (제12조) 행정지도 등록 및 공개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금융당국이 규제민원과 관련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 부서장은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행정지도 시행 이후 7일 이내 전산시스템* 등록, 공개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kr)

- ☐ 행정지도 신규 시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

참고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등록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 4. 공판 개정 전의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정보 (통계법 제13조) 6.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7.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8.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9. 감사 관련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10. 징계위원회 회의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11.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정책 관련 각종 국제회의의 협상대응 준비 및 전략 관련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제금융기구 등이 정부 또는 공적기관과 협약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대 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비공개조건으로 생산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 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사 또는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되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다.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라.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p>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p> <p>가. (규제관련)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대판 2003.8.22, 2002두 12946)</p> <p>다.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라.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p> <p>마. 정책수립 과정 중에 수행한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p> <p>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p>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p> <p>8. 기타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1. 금융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p> <p>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3.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p> <p>4.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p>	

<p>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p> <p>7.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p>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1. 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p> <p>2. 업무상 취득한 금융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p> <p>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p> <p>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p>1.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p>2. 금융 법규 위반 관련 조사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8. (제13조) 존속기간

제13조(존속기간) ①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구두지도 : 90일
2. 제11조제2항의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3. 법률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지도 : 2년
4. 그 밖의 행정지도 : 1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행정지도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성격에 따라 존속기간을 차등화(제2항)

○ 구두지도는 90일 이내로 제한

○ 법령 또는 규정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2년* 이내로 설정 가능

* 당초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시 3년까지 설정이 가능했으나, 공청회(11.26) 업계 의견(법령을 규정해야 할 중요한 규제는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존속기간을 축소시키는 게 필요)을 일부 반영, 2년으로 축소

□ 법제화가 필요한 행정지도가 행정편의에 의해 행정지도로 계속 존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제3항)

○ 그러나 법률 제정 건은 국회 심의기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장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9.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존속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지도, 감독행정은 매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 사후 보고

○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명령하여 통제

참고 법령등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V. 감독행정

10. (제15~16조) 감독행정

제15조(사전통지) 금융당국 소관 부서장은 감독행정을 시행·변경 또는 폐지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부서에 시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지도 준용) ①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제1항제2호의 존속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전년도 시행 감독행정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감독행정은 “행정지도의 원칙”(제7조), “존속기간을 제외한 행정지도 시행방식”(제8조), “사전보고”(제11조), “등록 및 공개”(제12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제14조)을 준용

VI.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11. (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금융당국은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당국의 기관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타당성

2. 제4조·제5조·제6조 준수여부

④ 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공표한 규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⑤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 논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 금융당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제1항)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제2항)

- 금융위원회, 금융유관기관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규제일반원칙 및 합리화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외부에 공개(제3.5항)

※ 6.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7개 합리화기준 제시

- ①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
- ②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③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
- ④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⑤ 업권별·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
- ⑥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⑦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각 호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사행정규제"라 함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정관·내규 등 각종 규정중 국민·회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7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
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
4. 유사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회의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배석 등) ①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 의견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 2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감독원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독원 소속 내부위원 2인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독원 법무실 담당 부원장보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감독원장이 임명하는 1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법무실 담당 부원장보와 감독총괄국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 법률, 회계, 경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단체·시민단체 관계자 중 금융 관련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10년 이상 그 직에 있는 자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경제전문가 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원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제4조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감독원장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제9조에 따른 서면결의를 포함한다)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제18조) 옴부즈만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직무수행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 처리
2. 옴부즈만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계획 이행 모니터링
3. 옴부즈만과 신고 접수기관은 옴부즈만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문서 등을 신고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4.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금융당국 소관 부서장은 매년 12월까지의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분기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 옴부즈만은 독립적 직무수행기구로 설치(제1항)

☐ 옴부즈만은 비공식적 행정지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등의 기능 수행(제2항)

- 단순 민원, 정책제언 등 기존 창구(국민신문고, 비조치의견서 등)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옴부즈만 직무범위에서 제외

☐ 옴부즈만의 신고인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규정(제3항)

☐ 금융당국의 옴부즈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5항)

☐ 옴부즈만은 연간 활동결과를 매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 공개(제6항)

참고 1 금융위 ombudsman 개요

가. 주요내용

- (도입방향)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ombudsman 독립성 확보
- (ombudsman 위촉) 민간 전문가를 위촉(임기 2년, 연임 1회 가능)하고, 업권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위촉
 - * 은행·보험·중소·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전문성을 갖춘 ombudsman 임명
- (직무범위) 비공식적 행정지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등
 - 단순 민원, 정책제언 등 기존 창구(국민신문고, 비조치의견서 등)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ombudsman 직무범위에서 제외

□ (절차)

① 금융당국* 또는 협회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고창구 개설

② ombudsman이 신고내용 검토 및 개선권고

- 당국은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상정

* ombudsman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소관 부서에서 ombudsman의 개선권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③ 금융위·금감원은 각각 ombudsman에 조치계획을 회신

④ 매년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는 금융위 보고 → 외부 배포

□ (효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mbudsman 개선권고 의무 이행

나. 추가 검토 필요사항

□ ombudsman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 제도 활성화 장치

참고 2 금감원 ombudsman 세부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금융감독원 ombudsman의 자격 및 지위, 수행업무,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금융감독원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업무를 당해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지위) ① ombudsman은 금융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다.

②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3.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ombudsman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 및 감사실은 ombudsman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제척) ①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기관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ombudsman이 제척되는 경우에는 일반 민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mbudsman은 민원총괄부서에 대하여 민원소관부서의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업무) ① ombudsman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소관부서에 그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1. 금융회사가 제기한 건
2. 민원인이 ombudsman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3. 소관부서에서 ombudsman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과 사전에 협의한 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옴부즈만의 수행업무에서 제외한다.

1. 제재조치 관련 이의신청 사안
2. 감사실이 처리한 사안

③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직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실에 이송할 수 있다.

④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제재조치가 완료된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민원절차가 완료된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2.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견 청취 및 자문

제6조(업무처리 절차) ①민원총괄부서는 민원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처리해야 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이송한다.

②옴부즈만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총괄부서에 대하여 민원소관부서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 자료협조, 법률자문 등을 받아 '조사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서면으로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④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⑤옴부즈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총괄) ①법무실은 옴부즈만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한다.

②소관부서 등은 옴부즈만의 자료제출·자문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8조(수당 등)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3. (제19조) 금융현장지원조직

제19조(금융현장지원조직) ① 금융당국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총괄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금융현장지원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금융현장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기관 방문, 금융규제 민원 포탈 등을 통한 금융규제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관행 및 제도의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④ 금융현장지원조직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개선결과 전파·확산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설명회 개최, 현장작동 여부 사후확인을 해야한다.

⑤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반복되는 경우 현장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현황을 보고하고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을 규정

□ (현황) 업권별 4개 팀으로 구성

(단위 : 명)

팀명	금융위	금감원	협회	총계
은행·지주팀	2	4	1	7
보험팀	2	3	2	7
금융투자팀	2	3	1	6
비은행팀	2	3	1	6
총계	8	13	5	26

□ (업무 프로세스) 건의사항 등은 현장방문 후 2주내 피드백 원칙

- (건의사항) 관리카드 → 금융위(소보단), 금감원(혁신국)을 통해 소관부서 검토 → 금융개혁추진단(필요시)* → 점검반 → 회신

* 여러과 소관 사항, 현장점검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법령해석) 금융위 규제법무과에서 소관과와 협의해 처리 → 규제법무과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회신 + 현장점검반 통보

- (비조치의견서) 금감원 법무실이 소관국과 협의하여 처리 → 법무실이 금융회사에 대한 회신 + 현장점검반 통보

14. (제20조) 실태평가

제20조(실태평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2월 외부기관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 규정 준수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 규정 준수 실태를 평가

○ 평가결과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대외 공개

15. (제21조) 교육

제21조(교육) ①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당국은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신규 채용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규정내용에 대한 내부교육을 의무화

16. (제22조) 규제정비의 달

제22조(규제정비의 달) 금융당국은 매년 9월 규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 금융당국은 매년 9월 규제점검 결과 등 발표(훈시규정)

17. (제23조) 상벌

제23조(상벌) ① 금융당국은 이 규정 이행을 통해 금융행정 개선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규정 준수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임직원에 포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 제고**

18. (제24조) 적용 권고

제24조(적용 권고)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3. 자율규제기관(시장참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에 대해 회원을 직접 규제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 공공기관, 자율규제기관 등에 당해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화

※ '14년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숨은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업권별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숨은규제 목록** 공시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 적용대상 기관 예

공공기관	금융당국 위탁기관	자율규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협회(금감원장 영업점 검사 위탁) ▪생명보험협회(금감원장 대리점 검사 위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